

韓國 社會科學研究的 現況과 評價*

朴 東 緒**

.....《目 次》.....	
I. 序 論	나. 研 究
II. 現況의 分析	(1) 著 書
가. 人 力	(2) 學會의 活動
(1) 現人力	(3) 接近方法
(2) 새 人力의 形成	

I. 序 論

이번 세미나에서 韓國社會科學研究的 現況과 評價라고 하는 제목이 5개 論文중 첫번째로 提示된 것은 앞으로의 發展을 위한 政策을 論議하는데 기초가 되는 現況을 비교적 正確하게 파악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論理的인 순서가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제목자체가 너무나 廣範하고 一人의 힘으로서 벅찬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편견이 介入되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豫測되는 것이며 이의 是正은 여러 分野에서 參與하신 분들의 討論 비판을 받아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쓰기로 하였으며 또 하나의 動機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1976年 4월에 發足한 후 몇가지 사업을 計劃대로 遂行을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人名錄의 刊行이었으며 이번 기회에 이의 內容을 論文의 形式으로 分析 評價함으로써 한국사회과학의 發展에 좀 더 積極的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글을 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提示된 題目의 內容을 어떠한 것으로 把握을 하고 정리 體系化하여 論文을 作成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상술한 의도에 비추어 이번에 여기서는 一旦 社會科學이라고 하는 것이 單一性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난 수백년간 계속 分化되어 와 現在로서는 多元性을 內容의으로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社會科學의 정의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하나 여기서는 「實證的 合理的인 研究方法에 의하여 社會의 客觀的 法則을 도출하고 이에 의하여 人間의 福祉를 증진하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學問이라고 규정을 한다. 이에 內包되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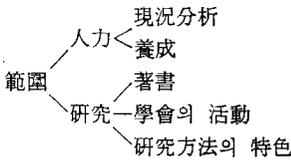
*이 논문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1978년 3월 17~19일에 유성에서 개최한 사회과학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다.

**教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러學問의 內容에 關係서는 여기서 是非를 論議하지 않고 사회과학협의회가 發足할 때 論議된 것, 人命錄이 준비될 때 論議된 것을 그대로 받아드리고져 한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歷史學인데 嚴格히 말하면 과거에는 人文學으로 간주되었으나 글 일에는 人文學과 社會科學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法學은 實證科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으나 하는 論議도 있으나 其他 社會科學의 研究에 긴밀히 關係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區別을 종래 嚴格히 하지 않던 사람은 지금도 當然히 社會科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되고 있어 여기에 包含시켰다.

이러한 內容을 가진 사회과학연구의 現況 및 評價를 一트 크게 人力과 研究로 나누어 人力에서는 人力의 現況과 人力의 養成을 검토하고 研究에서는 著書, 學會의 活動과 研究方法의 特色을 검토하고져 하였다.



여기의 人力의 대상, 범위는 「韓國社會科學研究人名錄」(1976기준)에 收錄된 사람들이며 主로 現在 國內 大學의 專任講師 以上の 사람과 專任研究員을 많이 두고 있는 큰 研究所의 人員中 人名錄에 수록된 사람들이 된다. 물론 本人의 非協助, 通信의 不實등으로 수록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현재 이 이상의 資料, 情報 수집이 不可能함으로 이에 한정 하려고 하였다.

다음 人力의 養成은 全國의 大學院 教育을 對象으로 하여야 하나 研究者, 教授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여기서는 現在까지 絶대 다수를 供給해온 서울大, 延大, 高大, 梨大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研究에 있어서는 單位로서 個人, 學會, 大學, 研究所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個人의 著書數, 學會의 活動(學會誌發刊, 發表會數, 論文數)을 기준으로 現況을 分析, 評價고져 하였으나 유감인 것은 多分히 質보다 量的기준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나 現在로서는 不可避하지 않나 생각되며 質的인 것은 參與하신 여러분들의 討議를 통하여 補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끝으로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社會科學에 內包되는 學問의 內容이 다양하여 아무래도 筆者의 專攻에 따른 편견이 적지않게 作用할 것으로 생각되나 加급적 보편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論議하고져 한다.

II. 現況의 分析

우선 人力을 現人力과 人力의 養成으로 나누어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 力

(1) 現人力

現人力을 다음의 6가지 기준에 따라 現況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性 別

男	女	合 計
1891	99	1990

女性은 全體人員數의 약 5% 미만이다. 이러한 현상은 他分野의 경우와 같이 女性의 교육정도에 비하면 社會進出의 比率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② 年 齡 別 (出生年度別)

年 度	人 員	年 度	人 員	年 度	人 員	年 度	人 員
1906~1910	10	1921~1925	119	1936~1940	425	未 詳	3
1911~1915	50	1926~1930	319	1941~1945	250	計	1,990
1916~1920	118	1931~1935	487	1946 後	129		

全體 1,990名中 mode는 1931~1935年生들이 되며 따라서 만41歲로 부터 45歲까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median은 약 43歲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他國의 자료가 없어 비교가 困難하나 大學의 歷史가 짧다는 점에서는 年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나 우리의 경우 다음에 보는바와 같이 初任年齡이 軍服務, 實績보다도 經歷위주의 人事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年老하고 있지않나 생각되어 판단하기 어렵다.

③ 初任年齡別(專講以上)

初任年齡을 學問分野別로 median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學 問 分 野	Median	40才이후初任者數	學 問 分 野	Median	40歲이후初任者數
政 治 學	33才	13人(172中)	心 理 學	32才	3人(41中)
行 政 學	32才	6人(87中)	歷 史 學	34才	18人(188中)
經 濟 學	32才	15人(279中)	教 育 學	32才	43人(360中)
經 營 學	33才	32人(211中)	地 理, 都市計劃學	33才	10人(61中)
法 律 學	33才	37人(234中)	考 古, 人 類 學	30才	1人(13中)
社會, 新聞·放送學	33才	13人(101中)			

學問間에 약간의 차는 있으나 어느 學問分野이던 大卒後 10年 이상 있다가 전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술한바와 같은 이유外에 大體로 韓國에서 博士學位 課程을 마친 분 이 많은 경우(法, 經營, 歷史)더 年老하고 있음은 年限 위주의 教育, 經歷위주의

人事와 관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문제가 되는 것은 40歲 이후 專任으로 初任되는 경우가 어느 分野이던 있는 것이다.

④ 學歷別(碩士, 博士)

學問分野	碩士	博士	總人員數	學問分野	碩士	博士	總人員數
政治學	157	105	194	心理學	39	17	46
行政學	101	47	100	歷史學	151	63	209
經濟學	253	149	308	教育學	347	101	404
經營學	222	85	265	地理, 都市計劃學	49	14	69
法律學	185	113	265	考古, 人類學	14	12	19
社會, 新聞·放送學	96	49	111				

大體로 博士學位 取得者가 碩士學位取得者의 50% 内外로 되어 있으나 이 線을 크게 넘고 있는 分野가 수는 적지만 考古, 人類學, 政治學, 法學, 經濟學 分野이며 크게 未達하고 있는 分野가 教育學, 地理都市計劃學, 經營學, 歷史學分野로 되어 있다.

이中 教育學은 初級大學 教授가 수적으로 많은 것이 주요원인인 것 같으며 地理 특히 都市計劃分野는 新生分野임으로 博士學位課程의 未設置가 주요원인인 것 같다.

다음 여기에 수록된 總人員中 博士學位 取得比率로만 보면 50%를 넘고 있는 分野는 考古人類學과 政治學分野 뿐이며 다음 이에 近接하고 있는 分野가 行政學, 經濟學, 社會, 新聞·放送學으로 되어 있으며 크게 미달하고 있는 分野가 教育學, 地理都市計劃學, 經營學, 心理學, 法律學으로 되어 있으며 前述한 碩士, 博士의 比率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보는 경우 學歷上으로는 考古人類學, 政治學分野가 比較的 높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分野는 후술하겠지만 外國留學에서 취득한 比率이 높은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우선 博士의 경우 국내와 국외가 비등하지만 국외가 약간 더 많음은 유학자의 比重이 크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그간 국내박사학위 과정이 不進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外國의 경우 미국이 376人中 282人을 차지함으로써 壓倒的으로 많으며 日本, 獨逸, 佛의 順이지만 너무나 不均衡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사의 경우 國內가 壓倒的으로 많으며 미국, 日本이 다음순으로 되어 있음은 국내 대학원 교육이 석사까지 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外國에 간 사람은 많은 노력끝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귀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사의 경우 학문분야별로 보면 국내학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分野가 법률학, 역사학, 경영학이며 경영학을 除外하고는 學問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상의로 생각되는 것은 경영학의 경우인데 학문의 성격으로 보면 국외가 많을 것 같은데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50年代, 60年代初까지 비교적 높지 못함에도 있었지만 생각된다.

다음 국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며 다분히 학문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국외의 경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학, 행정학, 지리 및 도시계획학, 사회, 신문·방송학 등이고 반면에 비율이 저급한 분야는 역사, 법학으로 되어 있다.

⑤ 國家別 學位取得(博士·碩士)

(單位:名)

學問	學位	國		韓		美		日		獨		佛		英		奧地利		濠		中		其他	
		碩士	博士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碩	博
政治學		105	51	37	38	6	3		1	1	3	3	4		1		1	5	3				
行政學		84	18	15	24	1		1	1		2	1	1										
經濟學		143	73	78	54	23	13	1	4	3	1	3	2					1	2	1			
經營學		175	46	36	25	8	7	2	5		1	1	1										
法律學		155	73	14	19	7	5	7	11	1	2	2	1									1	
社會, 新放送		38	19	47	24	4	1	3	3			1	1	1	1			1			3	1	
心理學		31	8	8	7				1		1												
歷史學		135	29	9	8		2		2		1		1	1						5		1	
教育學		274	23	69	73	2			1		1	1		1	1	1							
地, 都計學		38	5	9	7	2	1		1					1	1	1							
考人學		11	4	1	3	1	1				1	1				1					1	1	
計		1,189	343	323	282	54	33	14	30	6	12	9	10	1	8	2	2	12	6	6	2		

	碩士	博士
國內	1,189	343
國外	427	376
計	1,616	719

⑥ 加入學會數

學 會 數	人 員 數	學 會 數	人 員 數
1	671	4	101
2	479	5 이 상	50
3	228	없 거 나 未 詳	461

여기서 統計만으로는 學會加入이 不進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원인이 아직 우리의 경우 學會에의 加入이 他先進國에 比較하여 一般的으로 소극적인 면이 있으며 제각기 個別的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있으나 보다 큰 원인은 조사표에 기입을 誠實히 하지 않은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社會科學의 진전을 위해서는 個人別 보다는 集團의 構成員들간의 相互作用을 통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學會에 加入하며 또한 學會에 대한 比重을 많이 두도록 하는 것이 요당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 學會에 따라서는 投入된 時間에 비하여 얻는 것이 적다고 생각될 정도의 活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 이러한 學會는 육성해 나가도록 學會의 責任者 및 構成員들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 같다.

(2) 새인력의 形成

現存인력은 이미 검토한바와 같으나 여기서는 새인력의 양성을 大學院의 碩, 博士 教育을 中心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大學院 教育의 成果라고 하는 點에서 體制的인 分析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比重을 갖고 있는 것이 教授의 質과 意慾이며 이외에 教科內容, 學生의 質, 意慾, 教育方法, 財政 및 施設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 教 授

社會科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教育한다고 점에서 前述한 現인력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많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大學院 教育에 대한 意慾의 경우 더 큰 것 같다.

意慾이 높지 못한 것은 오랜 學部中心의 教育, 學部生의 活動問題로 인한 무거운 부담, 大學院을 課外的인 것으로 보는 습관등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缺點을 조금이라도 是正코져 서울大學校는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大學院을 別途로 두지 않고 各單科大學이 學部, 碩士課程을 一貫해서 관장, 책임지게 하였으며 이의 成果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보다 確實한 것은 大學院 소속으로 專任을 두는 方法이며 우리의 경우 科學院이나 專任職業大學院을 除外하고 아직 없으나 금후 고려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教科內容

社會科學徒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問題가 있다면 지나치게 單一學科의 內容으로 教科內容을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市內 4個大學의 경우 소속학과 外의 補修공을 認定하고 있는 것은 이화대학교의 박사과정 밖에 현재 없는 것 같으며 따라서 너무 좁게 전문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共通的인 問題는 社會科學方法論에 대한 教育이 약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존지식, 기술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으나 變化, 發展이 급격한 現在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既存知識보다 研究方法인데 아직 이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 및 이에 따른 教育의 강조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③ 學 生

社會科學徒가 되고져 하는 國內大學院의 學生의 質도 계속 저하되고 있지만 이들의 意慾도 저하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의 주요 이유는 社會科學徒가 갖는 매

력의 저하, 國內大學院教育의 높지 못한 평가, 大學 및 研究所外의 매력적인 취업기회의 擴大, 大學院教育費의 양등과 이의 投資效果의 상대적 저하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各大學의 大學院生中 法學科만이 人員數가 많으나 이는 司法高試準備를 위한 것이 절대 다수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서는 關心을 가질 必要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教授方法

이상과 같은 教授와 學生들간에 이루어지는 大學院教育의 교수방법 또한 높이 평가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開店休業」상태를 최근 면해가고 있는 감이 있으나 아직도 수제, 독서, 토의, 지도의 내용, 양이 外國에 비교하여 너무나 未及한 것이 실정인 것 같다. 따라서 최소한도 科別로 교수들간의 토의를 거쳐 교수내용의 質, 量을 向上시키기 위한 劃期的인 對策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行政大學院에 신설된 博士課程의 교수내용 충실을 위하여 그간 교수들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集團討議의 결과 採擇된 主要內容을 소개하면 우선 科目別 教材費의 지원, 讀書量의 최저한도선의 경정, 科目別 論文의 作成 및 이를 全教授參席下에 發表케 하고 이것을 자료실에 영구 보존케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같이 함으로서 在學中 철저히 情誼化(personalized)되는 것을 防止하고 集團統制 및 指導를 함으로서 個人別指導의 不實化를 豫防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⑤ 財政 및 施設

大體로 大學院 專用教室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장학금, 유급조교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많다. 우선 장학금의 경우 서울대 33.7%, 高大 21.5%, 延大 30.75%, 梨大 27.7%등으로 되어 있으나 各者 받은 액수도 문제이며 이제는 私經濟領域으로 부터의 고용기회의 호전으로 인하여 大學院 教育은 최소한도 무료(例示—科學院)로 할 수 있게 되지 않고는 우수한 人力을 吸收한다고 하는 것은 期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研 究

研究의 내용은 크게 個人의 著書, 學會의 活動 및 接近方法등으로 나누어 檢討하고자 한다.

(1) 著 書

個人의 研究가 著書로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論文의 경우는 수도 많고 그 內容을 일일이 個人의 힘으로 把握할 수도 없는 것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다만 昨年에 作成된 社會科學研究人名錄에 著書を 기입하게 되어 있어 論文보다는 훨씬 충실히 기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統計로 보면 人員數 보다 많은 著數의 수를 갖고 있는 分野는 行政學, 法律學, 社會, 新聞・放送學, 心理學, 教育學, 考古人類學등이며 이 中에서도 心理學과 考古人類學이

	著書數	人員數		著書數	人員數
政治學	188	194	心理學	68	46
行政學	110	100	歷史學	170	209
經濟學	169	308	教育學	427	404
經營學	120	265	地理, 都市計劃學	44	69
法律學	328	265	考古, 人類學	28	19
社會, 新聞·放送學	137	111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교적 적은 分野가 經濟學, 經營學, 歷史學, 地理, 都市計劃學 등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著書에 대한 社會的 需要와 研究人의 趣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2) 學會의 活動

韓國 社會科學徒의 研究가 大體로 50年代에는 個人別로 이루어지다가 60年代에 들어서면서 學會의 活動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學會에서 마련한 會合에서 論文發表 討議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研究가 社會科學協議會에 加入하고 있는 9個學會의 경우 어떠한 양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은 表로 정리하여 보았다.

學 會 實 績 現 況

1978. 2. 15.

學 會 名	會員數	分 類	發 行 및 發 表 回 數	創 刊 年 度	總 卷	面 數	備 考
1. 韓國政治學會	409	1. 學會誌	년 1 회	1965	11집	400	133편 수록 12편정도 3편정도(1회) 3편정도 합동대회論文 125편 總 258편
		學會소식	년 4 회	1976	4회	8	
		2. 年例세미나	년 1 회 (매년 12月)				지방분회공동세미나 서울분회공동세미나 년2회(地方) 년1회이상 (서울)
2. 韓國經濟學會	200	1. 學會誌	년 1 회	1953	25권	170	금년부터 2회 總 160편
		뉴스레타(무)					
		2. 學術發表會	년 2 회 (년차대회 및 정기연구발표 회)				
3. 韓國行政學會	300	1. 學會誌	년 1 회	1966	11집	300	72편 수록 -330 1회 5편 특집 40편 總 112편
		뉴스레타(무)					
		2. 年次大會	년1-2회	1967			
		3. 定期發表會	년3회이상	1967			

學 會 名	會 員 數	分 類	發 行 및 發 表 回 數	創 刊 年 度	總 卷	面 數	備 考
4. 韓國心理學會	120	1. 學會誌 뉴스레타 2. 年次大會 月例發表	년 2 회 년 4 회 년 2 회 (봄·가을)	1968 1945	8호 19호	60 4-8	77년이전 (년 1회) 1회8편 발표 77년부터없음 總 250편 (개략)
5. 韓國教育學會	920	1. 學會誌 뉴스레타 2. 年次大會 月例發表	년 3 회 년 6 회 년 1 회 (불규칙) 년3-4회	1963 1963 1959	30권 116호 총16회	8	년차대회논집 (14집) 總 230편
6. 韓國社會學會	160	1. 學會誌 뉴스레타(무) 2. 社會學大會 (春季, 秋季) 月例發表會	년 1 회 년 2 회 년3-4회	1964	11집	불규칙	57편 수록 특집 6편 연구보고11편 總74편
7. 韓國國際政治 學會	302	1. 學會報 뉴스레타 2. 年例學術大會 月例發表會	년 1 회 년 4 회 년 1 회 (불규칙) 년4-6회	1960 1977	17집 3권	200 -300 4	總 120편
8. 韓國經營學會	350	1. 學會誌 學會消息 2. 學術發表會	년 1 회 년 4 회 년 3 회	1971 1971	6집 27호	180 8-10	3-4편 발표 總 60편
9. 韓國經濟史學 會	80	1. 學會誌 뉴스레타 2. 年次大會 月例發表會	년 1 회 (무) 년 2 회 년4-5회	1975 1965	2호 20회	150	4-5편 발표 (100편추측) 2편정도발표 (80편추측) 總 180편

* 9번을 제외한 전체발표 論文의 수치는 실무자 제보임.

大體로 모든 學會가 學會誌를 年1회 乃至 2회 發刊하고 以外에 年例세미나, 定期的(月別 또는 季節別) 發表會를 갖고 있으며 Newsletter(消息)을 발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經濟學會(1953)와 經營學會(1971)를 除外하고는 1960年代에 學會報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興味있는 일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60年代에 學會中心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學會誌가 최소한도 年2回 이상 發刊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各 研究者들이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大學, 研究所에서 간행하고 있는 論文集에 論文을 쓰고 있어 현재로서는 學會誌가 2回 이상 發刊될 수 있게 質이 높은 論文이 집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비용과 더불어 문제인 것 같다.

(3) 接近方法

解放後 우리나라의 社會科學徒가 주로 이용한 接近方法中 주요한 것을 列舉하면 歷史的方法, 法制的方法, 行態的方法, 體制的方法, 計量的方法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들中 歷史的, 法制的方法是 大體로 서술적, 규범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갖고 있었으며 아직 本格的으로 科學化를 위한 努力은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大體로 50年代 中葉이후 行態的, 體制的 接近이 초보적인 計量的 方法과 더불어 도입, 이용되면서 科學化를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60年代 初期까지만 해도 大體로 外國의 文獻을 구입, 이해, 소개하는데 바빴으며 따라서 많은 교과서가 出刊되기 시작하였으나 內容으로 보면 어느나라의 것인지 분간하기 困難할 뿐만 아니라 자학적인 內容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傾向에 대한 反省이 大體로 1960年代 中半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指向할 方向을 몇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研究方法의 土着化의 문제이다. 우선 土着化의 概念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나 여기서는 研究의 對象을 韓國社會 위주로 하고 여러 接近方法中 韓國人 行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보다 適切한 方法을 선택적으로 擇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例示하면 韓國人의 行動, 意思決定에 막대한 影響力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政治權力, 經濟力등을 경시하는 接近方法, 또는 기초통계의 신빙성이 높지 못한데 計量的 方法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것의 잘못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西歐에서 어떠한 方法이 創案되고 流行하고 있다고 해서 덮어 놓고 우리도 이에 따라야만 一流 社會科學徒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차차 지양되어야 할 것 같으며 앞으로 社會科學協議會가 이 문제만을 가지고 토의를 벌였으면 한다.

둘째 2次大戰後의 새로운 傾向은 社會科學內의 學問이 계속 분과의 길을 걸으면서 또 한 쪽으로는 相互 관련성을 강조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學際的 接近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제창되고 있으며 이의 內容 즉 學際性을 分類하여 multi, cross, transdisciplinary등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各 學問의 專攻者로 호칭되는 社會科學徒가 學際的 研究를 할 수 있는 能力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달로만 이의 중요성, 긴요성을 주장하고 있지 아직 거의 multi-disciplinary의 領域을 벗

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實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환언하면 各學問의 專攻者가 어떤 社會問題를 연구하는데 他學問의 專攻者의 도움이 있어야겠다는 必要性은 이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스스로 연구할 能力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의 주요이유는 現在 우리나라의 社會學徒의 教育的 背景이 지나치게 各學問의 分化, 獨自性이 강조되던 時代의 영향을 받아 교육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속히 社會科學의 여러 學問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기성인은 물론 大學生, 大學院生에게 경주되어야 할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비추어 유감인 것은 學點의 축소 조정에 따라 單一科 所屬교수의 강의만 듣게 하는 폐단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서울大의 경우 同一專攻 교수의 同一學科에의 集結에 따라 더욱 심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재고가 요청된다.

세제로 연구비의 支援이 여러가지 이유로 公私機關에서 증액되고 있음과 동시에 교수의 新規 任命時는 勿論 승진, 재임명시에 研究業績을 고려하게 하고 있어 앞으로 量產될 가능성이 많아 一旦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되나 걱정되는 문제는 연구의 내용이 지나치게 應用科學, 政策과제의 성격을 띠거나 質的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과학이란 속명적으로 순수과학과 應用科學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나 순수과학의 연구 진전없는 應用科學의 功獻은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째로 사학과학의 연구와 연구의 자유는 어느 분야보다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自由의 정도는 各國의 역사, 문화, 사회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도 이의 例外가 될 수 없으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社會科學徒가 이문제로 困하여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感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發展을 위하여 社會科學徒로서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연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外面하고 시급성이 높지 못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을 念願하는 社會科學徒로서 이론적인 연구 토의를 보다 積極的으로 한국의 현실문제를 놓고 연구, 논의가 과감하게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相對的으로 적은 수의 社會科學徒들이 그간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저서를 출간 하였음은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이들의 大部分이 학부의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질이 의심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아직도 著者의 對象觀, 이에 일치되는 체계화, 接近方法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으며 이의 原因은 많은 경우 연구의 진전 없이 출판물 서두르는

데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과서를 저술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공감,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체계화, 接近方法에 따라 저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一步 전진하여 교과서의 영역을 벗어난 연구가 많았으면 한다.